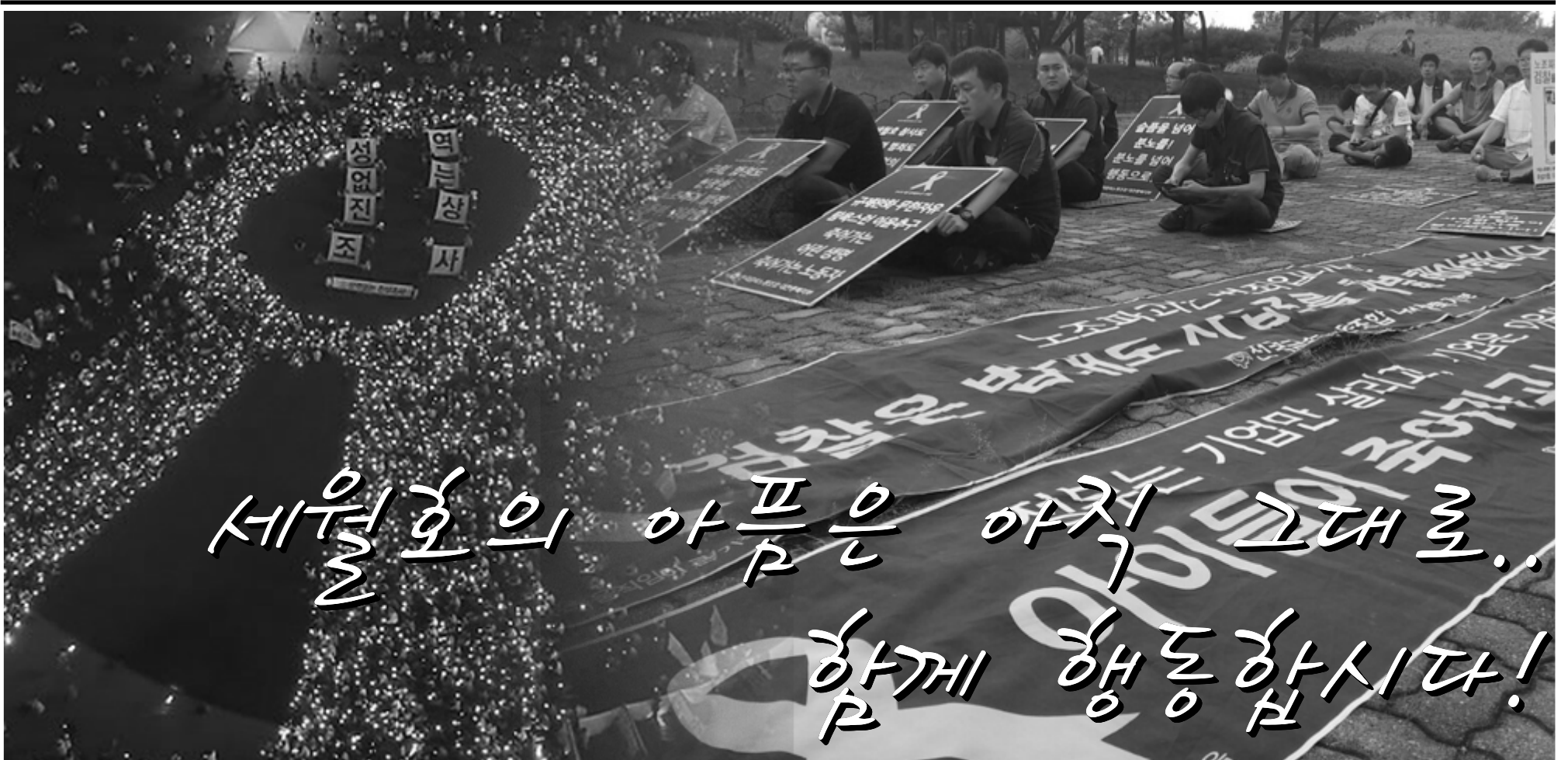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5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8월 13일(수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8월 15일

10만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정치권, 여야의 야합으로 세월호 덮으려

벌써 넉달이다.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지도 벌써 넉달이다. 누군가는 아직도 세월호 얘기라며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어떤 누군가는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죽는다며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은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야합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수사권, 기소권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 특별법으로 세월호를 적당히 덮으려 하고 있다.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세월호 관련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이상한 곳으로 흘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와 같은 유가족들의 요구는 저 뒤편에 쳐박아둔 채 유병언 체포에 온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유족 보상 문제를 거짓으로 퍼뜨려 유가족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검찰, 경찰이 그렇게 뒤쫓던 유병언은 의심스러운 시신으로 발견됐고, 유족들은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자본과 정치권의 유착, 부정부패에 찌든 국가기관, 이윤 지상주의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의 해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실히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은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자체가 제정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야합에 발목이 잡혀있다.

노동자가 움직여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은 단식을 통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단식 중인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16일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호응해 노동자, 시민, 법조계, 학계 등 416명의 인사들은 12일부터 16일까지 '416 국민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15일에는 광화문에서 10만 범국민대회를 통해 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15일 서울로 가자. 10만의 목소리로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세월호의 진실을 꼭 밝혀내자. 노동자가 움직일 때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지 않는다면

4.16특별법 제정 촉구! 10만 범국민대회

■ 2014년 8월 15일(금) 15시 / 광화문 광장

어용노조의 실체, 밑바닥까지 다 보였다

노조파괴에서 복수노조는 자본의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 노조라는 외피를 쓴 자본의 앞잡이를 내세워 아주 손쉽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나 통상임금이라는 첨예한 문제 앞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쉬전장 어용노조는 2014년 입단협에서 통상임금 내용을 개악하려다 찬반투표에서 두차례나 부결되는 사태를 겪었다. 기존에 퇴직자까지 일할지급하던 상여금을 일할지급없이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결론나면 어용노조도 똑같이 지급하도록 대표이사로부터 약속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려했다. 자신들은 어용이라 모든 권리를 팔아넘겼지만, 금속이 쟁취하면 자기들도 받을 수 있게 회사에게 구걸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없는 것이었다.

경주의 발레오만도의 어용노조는 6월에 이미 자본에게 통상임금을 통째로 양보하면서 조합원의 권리를 고스란히 갖다바쳤다. 상여금 700%를 성과연동 상여금으로 변경해서 조합원 등급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등급에 따라 최고 연4천7백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었다. 결국 어용노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났고 재교섭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어용노조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 좋았다. 그러나 어용노조는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2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무마하고 있다.



11차 중앙교섭, 사용자 추가안 제출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는 8월12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사용자협의회가 진정성있는 제시안을 내지 않는다면 노조는 타결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 8월 셋째 주 15만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노조는 투쟁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노조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요구안에 대한 추가 안을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5천660원(월 통상임금 1,28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 지난해 합의안인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에 더해 △임금 보전을 위한 제수당 통합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할 때 협의 △월급제 전환 등 임금제도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사업장 실정에 따라 노사합의한다는 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회사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다만,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와 지급기준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생산공정,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1차 제시안 이후 추가안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옥동 노조 사무처장은 “사업장별 통상임금 교섭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의회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고 언급했다”며 “중앙교섭에서 대전제에 대해 합의해 틀을 마련해야 사업장별 현실 조건을 어떻게 반영할 지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충북 학교급식 노동자 "10명 중 9명 근골격계질환"

충북지역 학교 급식노동자 대다수가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11일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 10명 중 9명이 목·허리·손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조합원 2천100여명 중 1천200여명인 학교 급식실 조리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 조사에 나섰다. 중간 집계 결과,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했다. 이 중 상당수가 산재 요양을 신청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타 지역보다 열악한 인력배치 기준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북의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은 급식실 이용자 150명 당 1명이다. 강원도·대전의 경우 각각 급식실 이용자 100명·110명당 1명의 조리원이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부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이용자 100명당 1명의 조리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석 지부 교육선전부장은 “종전에는 교육청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인력배치 기준을 정했는데 이번 실태조사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조리원 추가 채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감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상황이라, 하반기 연구가 시작되면 노조의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ajswcool@naver.com



<7.28 보쉬전장 규탄 촛불집회>



<7.28 보쉬전장 규탄 집회_청주노인병원>



<8.11 노조파괴/세월호 촛불집회>



<8.11 노조파괴/세월호 촛불집회>